

# 북·중 정상회담 평가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시사점

## Online Series

2018. 05. 11. | CO 18-21

신 종 호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위원)

시진핑-김정은 정상회담 결과 북·중 밀착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역할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오히려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중 협력의 초점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집중하고, 다자무대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하며,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구상과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의 전략적 연계 및 북한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월 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 다롄(大連)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지난 3월 25~28일 베이징을 전격적으로 방문하여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한지 40일 만이다. 3월에 열린 북중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급격한 정세변화에서 소외되었던 중국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5월 다롄 북중 정상회담은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요청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과 목적 및 한반도 정세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매우 높다.

### 북·중 다롄 정상회담 배경과 목적

40일 만에 이루어진 김정은-시진핑 간 2차 정상회담의 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과 전략적 소통과 협력(협동)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월 중순 베이징을 전격 방문하여 2011년 5월 김정일 방중 이후 7년여 동안 성사되지 않았던 북중 정상회담을 재개함으로써, 당시 남·북·미 3국 주도로 급속하게 진행되던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중국을 끌어들였고,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 과정에서 ‘차이나 팩싱’을 우려하던 중국을 우군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번 5월 다렌 정상회담 역시 북한은 미국이 최근 비핵화 요구조건을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서 PVID(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고자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재강조했다. 이는 곧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 해법인 ‘단계적·동시적 조치’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동의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미중 전략경쟁 구도를 활용하여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미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 입장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북미 정상회담 합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던 상황을 만회하고 향후 한반도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지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시진핑 국가주석은 다렌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 실현 과정에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길 원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채택된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 가능성이 제기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추진이 제기됨에 따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주요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 북·중 밀착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영향

김정은-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2012년 이후 북중 관계는 상호 전략적 탐색과 조정을 반복했지만, 최고 지도자 간 상호방문은 2017년 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시진핑 집권 이후 북한이 4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하고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동참해 왔지만 북한체제의 붕괴를 촉진할 수 있는 대북제재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고, 북한 역시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과 최소한의 협력관계는 유지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에 이루어진 두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은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 국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첫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사에 대해 중국이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남·북·미 3국이 주도하던 비핵화 로드맵이 남·북·미·중 4국이 협력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남북한 당사자 해결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자국이 여전히 중요한 이해관계자라는 인식 하에 남·북·미·중 4자회담 혹은 다자적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이러한 입장을 북한에게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 역시 북미 정상회담이 가져올 긍정적·부정적 결과 모두에 대비하고, 이후 전개될 비핵화 및 평화체제 형성 과정에서 미중 전략경쟁 구도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중국과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가 급진전되고 역내 지정학적 구조가 급변할 상황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동아시아 전략구도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중국은 자국이 배제된 상황에서 북미관계 정상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중 전략경쟁 관점에서 소위 ‘북한카드’를 적절하게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관련국들 간 대화 및 협력 기조가 언제든지 긴장과 갈등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한반도 정세변화 속에서 중국 역할 추동 방안

한반도에 찾아온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및 남·북·미 3자간 협력도 중요하지만, 중국·러시아·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지렛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중국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추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나타나듯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전개될 한반도 정세 변화 과정에서 중국이 주요 이해당사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입장에서는 중국 역할의 불가피성을 감안한 정책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이 한반도 정세 변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차이나 패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 구축의 지지·지원 세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은 강대국으로서 ‘책임대국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역내 현안에 좀 더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한중 협력의 초점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함으로써 한중관계와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추구할 수 있다.

둘째, 중국은 향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자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 개입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중국이 포함된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을 주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된 남·북·미 3자 회담 뿐만 아니라 남·북·중·미 4자 회담 개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중국이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다자무대(ASEAN+3, AIB, 유엔 등)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최우선 의제로 설정할 수 있도록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

셋째, 북미 정상회담 성공 시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이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연계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번 다롄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조선노동당 제7기 3중대회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전략노선을 제기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 바 있고, 리커창 중국 총리 역시 5월 9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중 3국 정상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시 확실한 체제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향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국면이 지속되고 북한이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구상과 한국의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을 연계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참여시킬 수 있는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KINU 2018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